

종합 4기 방통위원은 누구?

현재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밖에 없어 의결 정족수(3명)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2면**

종합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3면**

오피니언 [칼럼] 블랙리스트 유감

업무 자체의 목표가 공명정대인 사법부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 **7면**



공영방송의 ‘사장 퇴진 운동’...정상화 위한 신호탄 되나

MBC “김장겸은 물러나라” 본사·지역 가리지 않는 릴레이 성명

KBS 양대 노조와 직능협회 약 한 달째 출근길 피케팅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세월호 참사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논란까지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학자들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 당시 축소 보도로 시정자들에게 외면당한 MBC가 먼저 움직였다. MBC는 기자, 아나운서, PD, 방송기술인들의 성명 발표에 이어 지역에서도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며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MBC 방송기술인협회도 6월 29일 성명을 통해 “한때 영광을 누렸던 그 MBC는 이제 없다”며 “MBC의 미래는 진정으로 MBC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허황된 것들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주요 책임자로서 지켜야 할 언론 중립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권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언론 중사자로서 권력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할 당신들이

오히려 그들의 추종자가 되어, 회사 구성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본사·지역사의 43개 직능단체들은 본사와 16개 지역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등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거취 등에 대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 조사는 임원을 제외한 보직 국장, 보직 부장뿐 아니라 일반직은 물론 업무직과 연봉직, 계약직 직원까지 전 직원을 총망라해 진행했으며 총 3,092명 중 2,093명이 답해 67.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 직원의 95.4%가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뉴스·시사 등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87%)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MBC 노조와 본사·지역사의 43개 직능단체들은 7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장겸 사장, 그리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즉각 퇴진이라는 (MBC 구성원의 95%를 넘는) 압도적 요구가 확인됐다”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의 상황도 MBC와 별반 다르지 않다. KBS는 약 한 달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과 10개 직능협회가 주축이 돼 출근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마다 20여 명의 KBS 구성원들이 본관 1층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고 사장은 이를 피해 새벽에 출근하거나 자각 출근을 하면서 구성원들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KBS 양대 노조와 10개 직능협회 역시 지난 6월 고대영 사장의 퇴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8%의 구성원이 찬성의 표를 던졌고,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와 이사회 해체에 대한 질문에서도 90%가 ‘예’라는 응답을 했다. 설문 조사는 KBS 국내 근무자 4,975명 중 3,292명이 참여했으며 66.2%의 응답률을 보였다.

양대 노조는 “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하락’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한 고 사장과 이 이사장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내부 구성원의 뜻에 따라 퇴진과 해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7월 6

일 성명을 통해 “고대영, 이인호 등 언론 부역자들이 이른바 ‘아몰랑’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라며 “고대영과 이인호 퇴진을 위해서 정의와 양심이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며 “과업에 돌입한다면 KBS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투쟁과 수단이 동반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KBS와 MBC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장 퇴진 운동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엄청난 도전”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숨죽여 지내던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노조와 직능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왔는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도 동참키로 했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가칭)’을 조

직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월 1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KBS·MBC 탈환을 위한 문화계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전 △전국적 일인사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MBC 노조가 김장겸 사장과 MBC 법인을 상대로 낸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전·현직 사장인 김재철·안광환·김장겸과 관련 실무자들의 위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절차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 기소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실무 간부와 노무 담당 사원들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다.

MBC 본사에 이어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6월 29일 신청됐다. 춘천지부는 이날 강원 고용노동지청에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승희 sh45@kobeta.com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 비정상적의 정상화 추진할 것”



©방송 화면 캡처

“해직 언론인 복귀는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종편 4개 한 번에 도입돼 방송 시장 왜곡 발생”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은 모든 이해당사자와 논의해 결론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내정 소식 후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송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을 공부했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에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등을

주로 가르치고 연구해왔다. 이후 도쿄대학교 객원교수, 컬럼비아대학교 방문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및 언론정보대학원장,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 시민방송 RTV 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7월 3일 논평을 통해 “이 교수는 한국의 언론학뿐 아니라 언론 시민운동의 역사에 오랫동안 함께 했던 원로인 동시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며 방송 정책의 초석을 놓기도 한 실천적 학자로 평가된다”며 “이 교수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대선 이후 지금까지 새정부가 보여 온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의 수준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7월 4일 “이 교수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환영한다”며 “적폐청산과 방송 개혁에 과감하게 나서주길 믿는다”고 밝혔다. 민연련은 “이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넘나들며 언론 개혁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참여형 지식인으로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27기) 부위원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는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몇 안 되는 학자”라며 “청와대가 지명 근거로 밝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갈 책임자라는 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기대에 맞춰 이 후보자는 방송의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7월 4일 오전 과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최우선 과제를 질문하자 “어

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을 확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송법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 ‘비정상적의 정상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비정상적의 정상화에 해직 언론인 복귀 문제도 포함된다며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냐”고 말한 뒤 “방송이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거나 하면 방통위가 감독 기능을 발휘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직 언론인 복귀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이 후보자라면 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분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였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이 종편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종편 1개 정도는 도입해도 되겠다고 생각해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4개가 도입됐다”며 “국내 방송 시장은 4개의 종편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도입돼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 후보자가 언론학자 시절부터 종편 특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종편 재승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된 TV조선·채널A·JTBC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했는데 기존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허가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MBN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송계 뜨거운 감자였던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종편을 도입한) 처음과 달리 지금은 (지상파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 하나 지상파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면 다른 매체의 광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디어종합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55호는 8월 9일(수)에 발행됩니다.

4기 방통위원은 누구?

민주당, 방통위원에 허욱 전 CBSi 대표 추천

허욱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문턱 못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통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전 대표에 대한 방통위원 추천안을 공식 의결했다. 허 전 대표는 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기획조정실 등을 거쳤으며 CBS 자회사인 CBSi와 CBS노컷뉴스 초대 사장을 지냈다. CBS 퇴사 후엔 인터넷매체 업코리아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하고, 3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2월 2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갑자기 최 전 원장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민주당은 6월 22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다시 진행했으며 최종 지원한 21명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23일 허 전 대표를 후

보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허 전 대표가 방통위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관련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 기자 출신이고 자회사 초대 사장으로 지내 방송 분야에 정통한 인물”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1980년대 해직언론인협의회와 새언론포럼은 6월 23일 성명을 통해 “허욱 씨는 2001년 CBS의 10개월 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한 대다수 동료 조합원들에게 등을 돌리고 경영진에 붙어 지탄을 받았던 경력의 소유자”라며 “그 이후 언론 현장을 떠나 방송통신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에 방송 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 도덕성 등 어느 기준으로 거론되는지 우려스러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 속에 허 전 대표를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6월 27일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서로 존중해 각 당에서위원을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밖에 없어 의결 정족수(3명)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백선휘 baek@kobeta.com

국민의당, 방통위원에 표철수 씨 내정

언론노조 “직업 정치인의 방통위원 내정 철회해야” 비판



국민의당이 표철수 전 경기도 정부부지사를 국회 추천 방통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KNN 사외이사 등

의 이력을 놓고 논란이 일자 숙고 끝에 재공모를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표 전 부지사를 비롯한 6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했고, 지도부 논의 끝에 차기 방통위원으로 표 전 부지사를 내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는 표 전 부지사를 내정했고, 서류 작업 등이 필요해 본인에게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표 전 부지사는 부산고, 서울대 출신으로 KBS에 기자로 입사한 뒤 YTN으로 이직 사업국장, 미디어국장 등을 맡았으며 이후 경인방송 전무이사,

제2기 방통위 사무총장, 한국언론재단 비상임이사, 경기도 정부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에서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선대위에서 공보단장을 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7월 7일 성명을 발표해 “직업 정치인의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표 전 공보단장은 2003년 제2기 방통위 총장을 지낸 뒤, 정치인으로 변신해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인물로 2014년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도전해 낙마했으며 올해 대선에선 안철수 대선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고, 이번엔 국민의당 당적마저 버리고 방통위원

후보로 나섰다”며 “직업 정치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까지 방통위원을 내정함으로써 4기 방통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고, 고삼석 상임위원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욱 전 CBSi 대표를 여당 몫으로 추천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추천안을 상정하지는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을 결정해 지난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7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 방통위원 추천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표 전 부지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백선휘 baek@kobeta.com

전국 언론학자 125인 성명 발표 “방송 독립”, “공영방송 정상화”

7월 5일 정오 상암 MBC 앞에서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방송 독립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언론학자들도 발 벗고 나섰다. 언론학자 125인은 “전국의 언론학자들은 방송 독립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7월 5일 정오 상암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25인의 언론학자는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독립된 방송은 민주 정치의 조건”이며 “언론 자유와 방송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작금의 현실에서, 언론학자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이번 성명서의 동기를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부정한 언론 현실과 비정상적인 방송 상황을 방조하거나 묵인해 온 점”에 대한 자기반성도 담겼으며, “방송 재민주화가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학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방송 독립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사측의 수용 △고대영, 김장겸 사장 등 방송 적폐 세력의 사임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의 복귀 및 복직 △특별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난 정권의 언론 탄압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자리한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방송은 국민의 입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입이 말하는 데는 쓰이지 않고 먹는 데만 쓰이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언론학자 역시 말과 글로 먹고사는 이들로, 같이 말하는 자로서 말의 공명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해 방송 독립 투쟁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적극적으론 지지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속해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쳐온 언론인들 역시 함께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난 6월 2일 MBC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 퇴진 구호를 외쳤다가 ‘자택 대기’ 발령을 받은 김민식 MBC PD의 말을 인용해 “지금 MBC에는 백여 명의 손석희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손석희 앵커의 현재는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언론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금 MBC에서 부역 언론인이라는 말을 듣는 이들이 잠재적 손석희”라는 것이다.

성명서를 낭독한 윤태진 연세대 교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명서를 냈으나 희망을 담아 한 발자국 정도의 힘이 됐던 것 같다”며 “이번 성명서는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백 발자국 혹은 그 이상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이달의 말말말

추미애 민주당 대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철수·박지원 머리 자르기’ 발언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추 대표는 6월 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당은 진상 조사라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우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와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야3당은 바로 “국회 협치의 판을 깨는 언행”이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정국이 그렇지 않아도 꼬여 있는데 여기서 화나는 정치하는 게 아니라 매듭을 풀아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충고해주고 싶다”며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머리 자르기도 하니 해당된 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증거 없이 어떤 일도 예단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인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가 관여했다고 단정하고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다”며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추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금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추 대표는 송영무·조대엽 부실 후보자와 함께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방통위원 의결 건은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7월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방송기술용어

ARKit



애플은 지난 6월 5일 WWDC 2017에서 증강 현실(AR) 플랫폼인 ARKit을 공개했다. ARKit은 아이폰의 카메라, CPU, GPU, 그리고 모션 센서를 활용해 안정적인 모션 트래킹을 지원하며 주변광 측정 기능을 추가해 객체의 그림자까지 정확하게 렌더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개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많은 개발자가 ARKit을 활용해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기 AppStore의 성공을 재현하면서 아이폰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AR 시대의 포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AR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AR 객체를 확

인하기 때문에 시야각이 제한적이고 몰입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AR 이용이 빈번해질수록 좀 더 편리하게 AR을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RKit의 출시에는 애플이 포스트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아이폰을 잇는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AR 단말기를 개발 중이라는 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 AR 안경을 공개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숙희 sh45@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유영민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 뒷전…도덕성 검증 놓고 여야 신경전



©방송 화면 캡처

노건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과의 유착 의혹 또다시 제기
민경욱 의원, 부인과의 대화 녹음 들려주며 “이게 바로 위장 전입”
유 후보자, 자녀 취업 특혜 “사실 아니나 의심할 수 있어 사과한다”
김경진 의원 “자료 안 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 자료 제출 요구

당초 4차 산업혁명과 가계 통신비 인하 등 정책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검증에 발목이 잡혔다.

7월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진행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유 후보자의 자제 검증을 위해 ‘위장 전입·세금 탈루·자녀 취업 특혜’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문회 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밝혔는데 유영민 후보자는 이중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며 “후보자 스스로가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건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과의 유착 의혹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삼성이나 애플과 비교해보면 LG전자의 실적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회사의 상무 출신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리를 책임지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으로 임명됐는지 답을 풀어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 의원은 “노건호 씨가 LG전자에 입사했을 당시 후보자

는 LG전자 상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1주일 만에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후보자도 결혼식에 갔고,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아들 잘 좀 봐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죠?”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결혼식장에 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음에 식사나 한 번 하자’ 말씀하셨고, 주말에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대통령이 직장 상사를 청와대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고 지적한 뒤 “이후 후보자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첫 공모에는 응시를 안 하고, 2차 공모 때 응모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한 것이냐”며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과 후보자 부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내밀었다. 민 의원은 “대화를 보면 ‘아이들 출근을 다 시키고 40분 거리를 이동해서 양평에 온다. 여기는 직장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명 거주한 것이 아니라 직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직접 살고 있지 않으면서 전임신고를 해놓은 것

저소득층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씩 감면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 월 2만 원의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주로 음성 통화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들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5차 레나 받으며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본료 폐지만이 해답은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더 큰

수수료 등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래부에서 지난해 우영메디컬에 81억 원을 지급했는데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서 “여기에 80억~100억 원을 못 쓰시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국가 자원 배분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전 자상거래 규모가 65억 원이었다. 이제 거의 모든 거래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에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

이게 바로 위장 전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면 2010년 1000평 남짓의 토지를 추가 구입하셨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니 7년 동안 땅값이 약 2배 반 올랐다. 왜 올랐나 보니 옥천리 소재의 부대가 터를 옮겼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알아보니 1000평 남짓의 규모는 여성이 일주일에 2~3번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유 후보자는 “1000평 정도의 밭에 매실이나 오디와 같은 과실수를 심었고 땅을 뒤집는 것과 같은 일은 저와 같이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또 농사에 관심이 많아 농업대학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이수했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 후보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고 의원은 “제가 받은 자료에 유 후보자와 부인인 최영자 님께서 2010년부터 옥천리 땅에 어떤 농사를 지었으며, 농약을 언제 썼는지 등이 빠곡히 적힌 영농일지가 있다”며 “최영자 님께서 농업협동조합, 농업대학에 다니면서 농사를 배웠는데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옥천리 땅을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직접 가보고서 말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의 인사 청문은 흠집을 내기 위한 신상털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장남이 입사할 당시에는 이미 제가 LG그룹을 떠난 후였기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장녀가 LG CNS에 입사할 당시에도 LG를 떠난 지 1년이 지났다”고 답한 뒤 다만 “국민 정서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의심할 만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모님 통신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 자료를 안 내면 의원들 입장에서 이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통신사 자료만 보더라도 사모님이 주 2~3회 양평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는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경감할 것” 강조

‘사업자 입장 대변하는 것 아니냐’ 질의하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월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근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편 요금제를 기초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셨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통신비 인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분석해보면 ‘통신사 반응에 따라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는 법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단기적인 대책은 이미 발표가 됐으니 시간을 갖고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의 이동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지만

“공공적인 배달앱 진출 고려 가능”

미래부 “의미 잘못 전달됐다” “배달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제공돼야” 해명

‘요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적 성격의 배달앱 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유 후보자는 7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달앱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요기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가에서 공공적인 배달앱을 만들어 잘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말했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최근 국내 배달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가입을 통해 매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광고비,

지를 수 있도록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라는 문구를 담길 원했다. 유 후보자를 ‘불량 자재’로, 논란이 된 몇몇 장관 후보자들을 ‘썩은 자재’로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7월 7일 ‘미방위 인사청문보고서 적반하장,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허위 날조를 일삼는 집권당의 적반하장이 가증스럽다”며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미방위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각당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미래부 장관 후보 청문보

고서에 실기로 합의했고, 심지어 신경민 간사는 한국당 측에서 20장 분량이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도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제시했다”며 “이를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내용은 주장을 무리하다고 말하는 자기 부정이냐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낙 문제가 심각한 후보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 장관 후보의 경우 그들보다는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기로 한 것이지 부적격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민주당 측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청문보고서 내용 놓고 여야 신경전 고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미방위는 7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의견 차로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제는 한국당이 청문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언론에 알려진 바를 종합해보면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모두 청문보고서에 담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집을 짓겠다면서 골라낸 자재가 온통 썩었거나 불량이다. 썩은 자재는 쓸 수 없으니 불량 자재라도 쓰겠다면 집은

OBS, 급여 삭감에 비정규직화 이제는 폐업까지 거론?

OBS 노조 “폐업을 말하는 대주주는 OBS에서 손을 떼라”



정리해고에 이어 급여 삭감과 비정규직화를 일방 통보한 OBS 사측이 이번에는 '방송사 폐업'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는 7월 7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어제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3차 설명 자료’를 보내 노조가 임금 감액에 동의해주지 않아 추가적인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엄포를 놓았다”며 “사측이 또다시 직원 협박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6/19 사측 설명자료 (단위:백만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총계
계획	122.5	111.2	116.3	177.3	177.8	746.6
실적	144.4	133.4	166.9	188.9	188.9	819.9
차이	+21.9	+22.2	+50.6	+11.6	+11.1	+73.3

5/4 사측 임단협 제출자료 (단위:백만 원)

구분	목표	실적	증감	목표	실적	증감
1월	209	211	2	209	220	11
2월	450	559	109	450	581	131
3월	910	1,070	160	910	982	72
4월	550	515	-35	450	450	0
5월	800	803	3	800	803	3
6월	900	796	-104	900	796	-104
총계	3,810	3,154	-656	3,810	459	-3,351

앞서 OBS 사측은 6월 19일 설명회를 열고 급여 15% 감액과 11명의 비정규직화를 공식화했다. OBS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50여 분 동안 진행될 설명회에서 “주주들이 증자할 의지가 없어 보이니 직원들이 나서 급여 반납을 결의해야 주주를 설득하고 증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급여 삭감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OBS 노조는 “사측은 반복적으로 허가

취소를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기에만 바빴고,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경영 수치 부풀리기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올해 광고 매출이 최초 계획 대비 7.3억 증가했으나 사업 매출이 계획 대비 7.4억 감소됐으며 광고가 늘었어도 임금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불과 한 달여 전 임단협 시 노조에 제출한 자료와 사업 매출 계획이 크게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업 매출 계획이 한 달 만에 20.3억에서 28.5억 원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경영 위기임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유진영 노조위원장은 “지금 OBS 문제는 10%나 20%의 임금 삭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하다는 회사가 조합의 ‘55억 원 퇴직금 출자 전환’ 제안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측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 OBS 관계자는 “사측은 모든 경영 위기의 책임을 임금 감액을 안 한 노조로 돌리지만 노조가 누누이 밝혔듯이 OBS의 위기가 단지 임금 10% 감액으로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100% 자체 편성을 하는 방송사가 단 2개의 자체 프로그램만 제작하면서 ‘과비용 구조’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OBS 노조는 “사측은 2016년 비상 경영과 재허가 위기 때 대체 무슨 노력을 했냐? 대주주는 “법적 지분 한도 7~8억 정도만 증가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왜 새로운 투자자에게 문을 닫고, 경영책임에 따른 감사엔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왜 항상 ‘뼈를 깎는 노력’은 직원들만 해야 하나”고 말했다.

앞서 OBS 노조는 ‘퇴직금 출자 전환’을 사측에 공식 제안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감자(減資)를 내건 바 있다. 이들은 “퇴직금 출자 전환의 목적은 실질적인 증자를 이끌어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방송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대 주주인 백성학 회장만 결단한다면, 그 지분만큼 새로운 주주를 영입해 증자를 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출자전환해 증자하면 현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OBS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13명을 해고했다.

OBS 노조는 “더 이상 희생은 없다”며 “10년간 희생의 결과가 방송사 폐업의 위기라면 우리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사업자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폐업을 무기로 OBS 구성원과 1600만 지역 시청자,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협박하는 대주주 백성학 회장은 더 이상 방송 사업자의 자격이 없다”며 OBS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재조사해야

임창건 KBS아트비전 감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반박



지난 2011년 KBS 모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도청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동아자유

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자는 6월 27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8일 뉴스타파는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현 KBS아트비전 감사) 인터뷰를 통해 KBS가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힌 문서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임 감사는 “녹취록 문건은 KBS가 만든 것으로 민주당 회의에서 의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쪽 써놓은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KBS가 한선교 의원에게 줬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 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해 고대영 KBS 사장이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 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비법상 불법 도청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이 도청이란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에 과거 한선교 의원에 국한됐던 피고발인의 범위를 고대영 현 KBS 사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임 감사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임 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에 당시 같이 근무했던

최경영 기자가 며칠 전 도청 의혹과 관련한 전화를 걸 어왔기에 또다시 왜 도청 의혹을 파헤쳐 KBS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고 말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오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도청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매우 황당한 심정”이라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는 불법 녹취록과 비슷한 발언록을 작성한 적도 없고, KBS가 한선교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검찰과 경찰이 한선교 의원은 건드리지도 못했고, 김인규 KBS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범람을 빠져나갔다”며 “KBS에서 녹취록을 작성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만큼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mj kang@kobeta.com

SBS ‘드라마본부 분사’ 추진? 제2의 콘텐츠허브?

드라마 PD들 “일방적인 분사 추진 논의 백지화해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SBS 사측이 드라마 본부를 통째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최근 전략기획팀이 작성한 ‘드라마 스튜디오’ 추진 방안 문건을 확보했으며 전략기획팀과 경영기획팀 중심으로 드라마본부 분사 추진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SBS 노조는 “사측은 플랫폼 다양화와 경쟁사 및 외주사의 성장 등으로 판권 확보가 어렵다며 스튜디오 형태의 드라마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문제는 드라마 부문의 분사 추진이 과연 SBS와 구성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SBS는 CJ E&M의 드라마 제작 자회사인 드래곤 스튜디오 같은 제작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BS 노조는 “결국 지금의 콘텐츠허브나 SBS플러스처럼 SBS와의 불공정 계약에 의존해 부당한 수익 유출 통로가 된 지주회사의 타 계열사처럼 변질될 가능성을 대단히 농후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로 김영섭 드라마본부장은 지난주 드라마본부 PD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튜디오 설립 시 SBS의 100% 자회사가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SBS 플러스나 콘텐츠허브에 쌓여있는 유보금을 투자 유치하고 지분을 넘겨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SBS 노조 관계자는 “결국 SBS의 수익 유출로 막대한 자본 이익을 쌓아놓은 플러스와 허브가 이를 종잣돈 삼아 영속적으로 SBS의 핵심 콘텐츠 제작

기능에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처럼 한시적 계약이 아니라 영구적인 지분 확보로 SBS의 이익 창출 핵심인 드라마 부문에 이른바 ‘빨대’를 직접 꽂겠다는 불온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SBS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은 바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6월 22일 진행된 긴급 간담회에는 드라마 PD 25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드라마본부 구성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재추진돼 온 본부 분사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PD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분사가 드라마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도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드라마 PD들은 내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온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추진 논의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53명, 투표 39명 중 분사 논의 찬성 1명, 반대 38명의 결과가 나오자 PD들은 기존 논의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PD들은 동시에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물론, 드라마 EP, 드라마 연출, 조연출 등 드라마 본부 주체가 참여하는 ‘드라마 콘텐츠 경쟁력 강화 TF’를 제안했다.

PD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영섭 드라마본부장은 단체 메일을 발송해 “플랫폼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 때문에 직접 발의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절대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해 확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SBS플러스, ‘일베 논란’ 캐리돌뉴스 폐지

“일베 연관성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 통감해 프로그램 종료기로”



©방송 화면 캡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합성 이미지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SBS플러스가 <캐리돌뉴스>를 폐지기로 했다.

SBS플러스는 6월 21일 “SBS플러스와 SBS FunE를 통해 방송된 <캐리돌뉴스>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사용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계열사인 SBS플러스 시사 풍자 프로그램인 <캐리돌뉴스>는 5월 17일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린 표지에 ‘Go To Hell Mr.Roh(노무현, 지옥에 가라)’라고 합성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후 해당 이미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캐리돌뉴스> 제작진은 다음날인 5월 18일 “사용한 이미지에서 사전 충분한 필터링을 하지 못한 명백한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SBS가 일베 이미지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지난 2013년 <8시 뉴스>에서는 ‘일 수산물 방사능 공포’와 관련된 보도를 전하면서 도표 하단에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를 노출시켰으며, 2014년 6월과 8월 10월에도 <SNS원정대 일단 띄워>, <매직아이>, <순간조작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이미지를 노출시켰다.

2015년에는 <8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이 합성된 음악이 뉴스 배경으로 깔렸고, <한밤의 TV연예>에선 영화 ‘암살’ 포스터에 노 전

대통령이 합성된 이미지가 사용됐다.

네티즌들은 “SBS 내부에 일베 회원이 있는 게 틀림없다”, “한번은 실수지만 여러 번 반복된 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고도 지상파 방송사라고 할 수 있나”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이에 SBS플러스는 이호규 동국대 교수,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송규학 한국독립PD협회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련 제작진, 타 제작팀 및 외부 제작 스태프 인터뷰, 제작 과정 확인, 인터넷 접속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제작진의 고의성 및 일베와의 연관성, 외부 침입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조사했다.

SBS플러스는 “조사 결과 내부 모니터링 및 게이트 키퍼, 사전 점검 프로세스 등 제작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작진의 고의성이나 일베와의 연관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자와 유족 등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SBS플러스 사장-제작본부장-해당 제작팀장-선임 PD에게 감봉 3개월 △담당 PD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기로 했다.

동시에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포털 다운로드 등을 통한 외부 이미지 자료 사용 금지 △불가피하게 외부 이미지 사용 시 검증된 외부 이미지 제공 업체와 계약을 통해 구매된 이미지 사용(웹블립 및 로고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접 제공받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안전한 정품만 사용) △외부 이미지 자료 사용 시 편집 전 원본 이미지의 검증 및 출처 확인(3중 크로스 체크 단계 후 최종 결정자의 서면 결재 진행) 등의 제작 가이드 및 시스템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SBS플러스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다시는 외부 이미지 사용 관련해 방송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청자 및 유족, 노무현 재단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2016년 방송 사업 매출’…전체 증가했으나 지상파 비중 줄어 방통위, ‘2016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 등 327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2016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을 공표했다.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 정보 제공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재산매체별 방송매출 현황

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5,978억 원(3.9%) 증가해 15조 9,146억 원이다. 이 중 위성방송사업자,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IPTV 콘텐츠사업자(CP)의 방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2016년			2012~2016년 평균증감률
						점유율	증감액	증감률	
지상파	39,572	38,963	40,049	41,007	39,987	25.1%	-1,019	-2.5%	0.3%
SO	23,163	23,792	23,462	22,590	21,692	13.6%	-898	-4.0%	-1.6%
위성	4,993	5,457	5,532	5,496	5,656	3.6%	160	2.9%	3.2%
IPTV	-	-	14,872	19,088	24,277	15.3%	5,189	27.2%	27.8%
PP	55,480	60,756	63,067	62,224	63,948	40.2%	1,724	2.8%	3.6%
-홈쇼핑	30,288	34,145	34,728	32,506	34,264	21.5%	1,758	5.4%	3.1%
-일반	25,192	26,611	28,340	29,719	29,684	18.7%	-35	-0.1%	4.2%
CP	-	-	613	2,655	3,482	2.2%	827	31.2%	138.3%
지상파DMB	116	95	104	108	103	0.1%	-4	-4.1%	-2.8%
위성DMB	189	-	-	-	-	-	-	-	-
계	123,512	129,063	147,700	153,168	159,146	100.0%	5,978	3.9%	6.5%

*IPTV와 데이터홈쇼핑PP를 겸업하는 SK브로드밴드는 IPTV로 분류

대법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하라” “JTBC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행위해”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6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상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6월 15일 확정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의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같은 해 8월 28일 JTBC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지상파 3사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출구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JTBC는 출구조사 결과와 창출 과정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으며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는 점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에 각각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지상파 3사가 예측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방송 3사가 상당 부분 발표한 후에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해 각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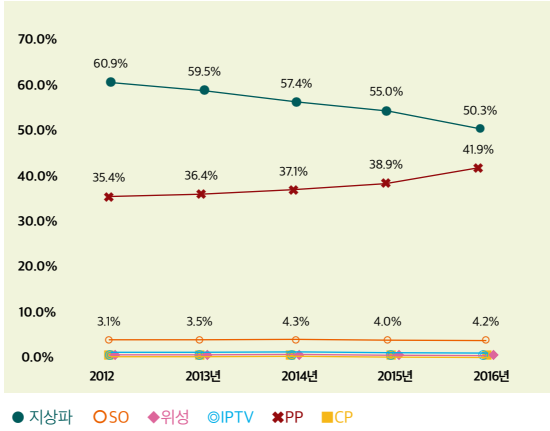
한편 지상파 3사는 민사 소송과 함께 손석희 보도 부문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3월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선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모(41) 팀장 등에 한해서만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송 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의 방송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상파(26.8%→25.1%), SO(14.7%→13.6%), 일반 PP(19.4%→18.7%)의 방송 매출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IPTV (12.5%→15.3%), 홈쇼핑PP(21.2%→21.5%)의 점유율은 증가했다.

수익원별로는 전체 방송 매출(15조 9,146억 원) 중 광고 매출이 20.3%,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수신료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2012~2016년)



전숙희 sh45@kobeta.com

ETRI, IEEE 방송기술 최우수논문상 수상 UHD 핵심 기술인 전송-영상 압축 기술 논문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6월 7일 이탈리아 칼리리아에서 개최된 ‘제12차 국제 전기전자공학회(IEEE) 방송 및 멀티미디어 심포지엄’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ETRI는 초고화질(UHD) TV 핵심 기술인 방송 전송 기술과 영상 압축 기술 관련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논문은 하나의 지상파 채널로 UHD 및 이동 고화질(HD) 방송을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로 계층분할다중화(LDM) 기술과 스케일러를 영상압축(SHVC)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다.

ETRI 측은 “복합지상파디지털방송규격(ATSC) 3.0 기반의 LDM과 SHVC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고정 및 이동 중에도 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지상파 채널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이 가능토록 만들었다”며 “이번 논문은 한 채널로 전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에 대한 이론적 성능 분석과 실제 방송 환경에서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TSC 3.0 기술은 이미 2015년에 ATSC 국제 표준의 기준 기술로 채택됐으며 작년 10월에는 LDM 기술을 포함한 ATSC 3.0이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된 바 있다.

ETRI 연구진은 “LDM 기술을 통해 일반 시청자들은 하나의 지상파 채널로 고화질의 고정용 UHD

매출이 22.3%, 홈쇼핑 방송 매출이 21.6%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프로그램 판매·제공 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및 협찬 매출 등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방송 광고 매출은 이번에도 감소했다. 전년 대비 2,489억 원 감소한 3조 2,247억 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매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비중은 2012년 60.9%에서 2016년 50.3%로 감소하고 있으나 PP의 비중은 35.4%에서 41.9%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수신료 매출은 3조 5,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1억 원(3.4%) 증가했다. KBS가 징수하는 수신료는 전년 대비 징수 대상의 증가(21,170천 세대→21,629천 세대)로 75억 원 증가한 6,333억 원이며 이 중 EBS에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177억 원을 지급했다.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은 전년 대비 1,084억 원(3.9%) 증가한 2조 8,969억 원이며 SO(981억 원)와 위성(126억 원)의 수신료 매출은 감소했으나, IPTV의 경우 가입자 증가(12,314천→13,563천) 등으로 2,191억 원 증가한 1조 7,209억 원이었다.

방송 및 이동 HD 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신할 수 있고, 또 SHVC 기술이 적용되면 기존의 이동 및 고정용 영상을 ‘고효율 비디오 코덱(HEVC)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부호화하는 방식에 비해 최대 30%의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IEEE 방송기술협회 최우수논문상 주역으로는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이재영(선임), 박성익(책임), 권선형(선임), 임보미(선임), 김흥목 미디어전송연구그룹장, 허남호 책임연구원이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KBS, 프랑스의 방송·영상기술업체인 테크니컬러(Technicolor), 캐나다의 통신연구센터(CRC)의 연구진도 함께 수상했다.

안치득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장은 “이번 연구진들의 수상은 우리나라 방송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방송 미디어 관련 ICT를 널리 알려 지식재산권(IPR)을 창출,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EEE 방송기술협회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술기구로 ETRI는 지난 2009년에도 ETRI 박성의 책임연구원 외 연구원들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6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에서 2017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방송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분기 수여되는 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2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MBC 강동석	△KBS 이하주	△KNN 최철규
△KBS 광명석	△SBS 이학주	△CBS 한광익
△TBN 박효진	△아리랑국제방송	
△EBS 이봉석	제주연주소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7년 방송계 이슈② | 지상파 UHD 방송

지상파 UHD 방송 잘 보고 계십니까?

문제투성이라고?...이제 시작이니 당연해

#1. A 씨는 2016년 약 500만 원의 거금을 들여 삼성전자의 UHD TV(모델명 65ks8500)를 구입했다. 조금 비싼 감이 있었지만 매장에서 본 선명한 화면이 잊히지 않았고, 내년부터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왕 구매할 때 좋은 것으로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됐지만 A 씨의 TV로는 UHD 방송을 볼 수 없었다. 2016년도 모델이라서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만 했다. 뭔가 속은 것 같았지만 UHD TV가 아까워 셋톱박스를 구입기로 했다. 동네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A 씨. 하지만 A 씨의 바람과 달리 셋톱박스는 매장에 없었고, 주문을 해야 구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안테나였다. 셋톱박스만 구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 씨의 바람과 달리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셋톱박스와 극초단파(UHF) 안테나를 같이 구입해야만 했다. 결국 A 씨는 지상파 UHD 방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2. 최근 LG전자의 UHD TV(모델명 55B7K)를 구매한 B 씨는 자연스럽게 지상파 UHD 방송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7년 모델이기에 안테나만 구입하면 UHD 방송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B 씨의 집이 문제가 됐다. 아파트 저층에서는 실내 안테나로 수신이 불가능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KBS와 LG전자에 문의했다. KBS에서는 실내 안테나가 아닌 실외 안테나를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면 된다고 했으나 B 씨의 아파트 옥상에는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LG전자에서는 실내 안테나의 수신 여부는 확인해줄 수는 있으나 실외 안테나 관련해서는 따로 해주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결국 B 씨는 구입한 안테나를 반품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의 UHD 상품을 구입했다.

#3. 지상파 UHD 방송을 보고 있는 C 씨는 'UHD 방송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2016년에 삼성전자의 UHD TV를 구입한 C 씨는 별도의 셋톱박스와 안테나까지 구입해 지상파 UHD 방송을 보고 있다. 하지만 화질도 기대한 것과 달리 큰 차이를 못 느끼고, 프로그램 역시 다큐멘터리와 몇몇 드라마뿐이어서 크게 실망한 상태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 지상파 UHD 방송은 지난 2001년 디지털 방송 도입 후 16년 만에 새롭게 시작되는 방송 서비스로, 기존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섬세하고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한다. TV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IP 방식 기반의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도 구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심지어 지상파 UHD 방송을 보는 사람도 극소수로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지상파 UHD 방송 시작 전부터 예견됐다. 본지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시청 기반 확보 △콘텐츠 제작 및 공급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내장 안테나 장착이나 공시청 시설 구축, 안정적 제작비 확보 등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밀려나 논의선상에서 점점 사라졌고, 결국 지상파 UHD 방송은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시작됐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듯 지상파 UHD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직접수신율이 5%대 수준이라며 직접 수신 가구가 없는 것을 지적한다. 물론 직수 가구가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모든 원인을 직수율로 돌릴 수는 없다. 본지에서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지상파 UHD 방송에 관심이 있고,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더라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들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내용으로 댓글도 상당수 달려 있다. 직수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A 씨와 B 씨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신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①거주 지역이 수도권인지 확인 ②UHD 방송 표준인 ATSC 3.0이 적용된 UHD TV인지 확인 ③UHF 안테나(470~806MHz) 설치 ④자동 채널 설정으로 UHD 방송 채널 수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자. 지상파 UHD 방송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다. 1단계 진행 후 7월로 예정돼 있는 지상파 UHD 2단계 허가가 이뤄지면 오는 12월부터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권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평창·강릉 일원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시·군·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순차 도입은 지상파 UHD 방송 초기부터 논의됐던 부분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ATSC 3.0 표준이 적용된 UHD TV 여부 확인부터 소비자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2017년형 UHD TV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017년 이전에 구입한 UHD TV의 경우 대부분 DVB-T2라는 유럽식 표준이 적용돼 있어 이 상품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2013년형부터 2016년형까지 적용 가능한 지상파 UHD 수신 키트(모델명 SEK-M90/KR)를 6만 9,000원에 판매 중이고, LG전자는 4포트 HDMI 선택에 웹OS 기반 스마트 기능까지 갖춘 지상파 UHD 셋톱박스를 6만 9,000원에 판매 중이다. 두 회사 모두 6월 한 달만 3만 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본지 취재 결과 7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3만 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UHD 셋톱박스를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 본지에서 서울과 인천의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이마트 등 삼성과 LG의 TV를 판매하고 있는 몇몇 곳을 돌아다녀 본 결과 셋톱박스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경우 주문을 통해 택배로 받을 수 있었고, LG베스트샵에서는 LG전자 서비스센터로 가보라는 답을 들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역시 바로 구매할 수는 없고 주문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은 “신청을 하면 구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아직 공급 일정이나 오지 않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마트와 이마트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지상파 UHD 셋톱박스라는 기기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LG전자의 경우 셋톱박스를 설치기사가 직접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기사와의 일정 조율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셋톱박스 적용도 삼성이나 LG 제품에만 해당된다.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이나 중국산 제품의 경우 셋톱박스가 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없다.

지난해 혼수로 UHD TV를 구입한 박 모 씨(34)는 “매장 직원이 TV의 경우 한 번 구입하면 10년은 써

야 하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사는 것이 좋으며 UHD TV를 추천했다”며 “가격 차가 커서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UHD 방송 시대라고 하길래 큰마음 먹고 샀는데 셋톱박스도 또 사야 하고 뭔가 다른 TV와 별다른 차별점도 느껴지지 않아 속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미 판매된 UHD TV에 대한 셋톱박스를 무상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7억 원”이라며 “이는 삼성전자가 미르재단에 기부한 60억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리콜했듯이 가전사는 UHD TV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TV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혀 반영되지는 않았다.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디지털 TV 시장에서 UHD 제품의 판매 점유율은 51%로 전 분기 대비 3%p 상승했다. 판매 금액으로는 전 분기 대비 5%p 오른 77%를 차지했다. UHD TV가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 점유율에 비해 판매 금액 점유율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다. 다나와 관계자는 “UHD TV 중에서도 대형 화면 제품의 인기가 상승 중”이라며 “제조사에서도 UHD TV 출하 비중을 높이고 있어 점유율 상승 추이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UHD 방송이라는 이슈로 가장 득을 보는 곳은 삼성이나 LG 등 가전사”라며 “고가의 UHD TV를 판매하면서도 셋톱박스 비용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는 것을 보니 대기업의 이기주의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UHF 안테나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선 내장 안테나를 장착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 주택의 경우 개별 동에 광대역 UHF 안테나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안테나 설치 없이 TV 벽면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단지에서 사용하는 헤드엔드(Head End) 시스템의 경우 2017년 2월 1일 이전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해 건축했다면 별도의 지상파 UHD 방송용 신호 처리기 설치가 필요하다. 아직 번복 조형 UHD 신호 처리기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각 세대에서 별도의 실외용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가구에서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이 역시 셋톱박스와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본지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이마트를 직접 방문한 결과 안테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LG베스트샵 밖에 없었다. LG베스트샵의 경우 UHD TV를 구입할 경우 직원의 재량으로 안테나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이마트에서는 각각 “마트에 가야 구할 수 있다”, “이마트에는 입점이 되지 않

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위의 업체에 가격을 문의한 결과 UHF 안테나 가격은 4~5만 원 수준이었다.

올해 이전에 출시된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셋톱박스 6만 9,000원에, 안테나 4만 원 등 최소 10만 9,000원의 비용을 더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내장 안테나 장착을 요구하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UHD TV 내장 안테나 설치 의무화를 정부 입법으로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내장 안테나 장착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계속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해외 수출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전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대중적 차원에서 최소 1~2개 모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역시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톱박스나 안테나 문제가 해결돼 시청 기반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볼 만한 콘텐츠가 없다면 시청자들은 지상파 UHD 방송은 물론 끝내는 지상파방송 전체를 외면할 수도 있다. 또한 UHD 화질 역시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C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는 그리 많지 않다. 방송사들은 허가 조건에 따라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올해 5%부터 시작해 매년 5% 이상씩 확대(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그 만큼의 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지상파 UHD 정책 방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총 6조7,903억 원이다. 방송 광고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약 25% 정도의 광고가 빠졌다”며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제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지만 UHD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가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B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 UHD 방송 상담 등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수신 신호가 좋아 난시청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도심 속 난시청 문제의 경우 상당 부분 해결이 어렵다. 이 경우 해결 및 대안을 위한 자세한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상파 UHD 방송 시작 전후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대다수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쪽으로 연락했다는 경우였다. 물론 지상파 UHD 본방송 시작 후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이드’가 배포됐지만 이 역시 관련 업계에서만 알고 있을 뿐 아직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지상파 UHD 방송은 이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저쪽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무조건적인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서비스도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정착되는 것은 없다. 문제점을 검토한 뒤 해결하거나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상파 UHD 방송도 마찬가지다. 2021년 지상파 UHD 방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그 과정들을 거듭해 나간다면 분명 몇 년 뒤에는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수신 환경 개선, 내장 안테나 장착, 콘텐츠 투자 지원 등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블랙리스트 유감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공공 부문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차별을
했던 것을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밈보인 사람들이
당연히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물론
방송기술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에 나온 김려령 작가가 쓴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2013년에 영화화되기도 했다. 소설 속 왕따를 당한 주인공 천지는 왕따를 고발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죽음이란 방법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키워드가 될 만한 것 5개를 킬 실 몸치에 남겨놓았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왕따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는 아주 많이 있다. 왕따를 시키는 이들에게는 개울에다 돌하나 던지기겠지만, 왕따를 당하는 개구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에 많이 다뤄진 것일 것이다.

얼마 전 모 사립초등학교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집안 아이들이 급우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문제가 됐다. 왕따와 폭력도 문제였지만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 부모가 소위 ‘갑질’을 해서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지난 정부 차원에서 자행된 왕따 리스트다. 며칠 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부 장관에 대한 구형이 있었다.

이달 말경 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 청문회 때는 해당 업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막상 문제가 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거의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하는 의리는 전혀 없다. 하긴 인간에 대한 의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권 차원에서 ‘저 사람들과는 놀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

다. 인류 역사의 변곡점은 대부분 차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평소애 공짜로 쥐도 안 먹는 건빵이라도 나만 못 받은 것을 아는 순간 열을 받는데,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면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모 방송사는 출연을 제한시키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심을 많이 받아왔다. 업무 자체의 목표가 공명정대인 사법부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 여성 가수 그룹 이름으로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미드 시리즈 제목으로 블랙리스트도 있다. 그룹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지으면서 방송 출연을 원했는지는 정말 모를 일이다.

공공 부문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차별을 했던 것을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밈보인 사람들이 당연히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물론 방송기술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D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P교수는 방송사 근무 시절에 4K UHD의 초고화질을 위해서는 1채널 6MHz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윗분들 눈 밖에 났다. 방송 주파수를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4K UHD 본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거금을 들여서 UHD TV를 장만한 시청자가 HD와 화질의 차이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면 대응이 군색해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UHD 부적격자’라거나 ‘이게요, HEVC라고 효율이 따블인 인코더라서 화질이 겁나 좋아요’라고 한들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새로운 방송 방식이 도입될 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열외를 시키는 왕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볼 때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인형·맞춤형 시대에 개개인의 경험과 비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크다.

전 세계에 70억 명이 있다면, 70억 개 이상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방송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광고 이외의 콘텐츠 유통이나 부가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 상품에 대해 지갑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양성에 대해 비판적인 체제는 빠른 속도로 파멸의 길에 들어섰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 정부 시절에 나름(?) 블랙리스트에 오르려고 노력했으나 필자의 박쥐같은 습성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다. 블랙은커녕 그레이 리스트에 오르지도 못했다.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고생한 여러 예술인에게 다시 한번 더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블랙리스트 없는 사회를 꿈꾼다. 하지만 마음속의 개인적인 블랙리스트는 지우기 힘들 것 같다. ‘야, 지금이라도 돈 갚아라.’

사설

4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개혁이 시급하다

오랫동안 공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와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정상화로 접어들었다. 통신비 인하 등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언론 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 다행이라 여겨지며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언론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언론 공범이라 지탄받으며 존재 의미가 미미해지고 있는 공영방송 KBS, MBC의 정상화일 것이다. 심의 기준이 무의미할 정도로 도를 넘은 상업방송의 범람 속에 미디어 문화의 기준을 세우고, 무시되기 쉬운 사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문화의 균형성을 회복하는 공적 영역, 이를 담당하는 정상적 공영방송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MBC의 경우 공정 방송을 요구하다 해고되거나 관련 없는 업무로 쫓겨난 구성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 공정 방송 요구자들을 배제했기 때문인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타사에 비해 과도하게 방송하는 등 정권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징계 남용과 그에 따른 재판, 잇따른 폐소는 회사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로 보인다. 이참에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물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와 소송 남발 문화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이

를 관리해야 할 방통위의 방기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통위의 책무를 재점검해 다시는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존재감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KBS도 마찬가지다. MBC와 똑같이 편향된 보도로 수신료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징계 관련 재판의 잇따른 패배로 징계를 통한 과도한 통제가 있었다는 의심이 크다. 또한, 얼마 전 양대 노조의 설문 조사에서는 사장이 구성원에게 88%의 불신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선정성, 편파 보도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방송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종편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도 선행돼야 한다. 특히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한참 못 미쳤음에도 재승인을 허가받은 TV조선 등의 경우를 조사해, 재승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 광고나 미디어랩 등 불균등하게 주어진 특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지상파와의 균형을 맞춰가며 왜곡된 방송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가치 저하와 종편에 대한 특혜 등 환경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저지투쟁위를 만들고 저하를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상임위원은 이에 동요하지 말고 방송 개혁에 전념해 국민으로부터 방송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1년간 8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UHD 송신 시스템(1차)

교육 일정

일정 2017.07.18.(화) ~ 07.20.(목), 총 3일

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20명

장소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문의

교육비 무료

담당자 민서진 대리, 박세나

문의사항 02-3219-5640~1

E-mail bea@kobeta.com

접수 방법

7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일정	시간	강사	교육 장소	교육 내용
1일차 7/18(화)	13:40~14:00(20분)	방송기술교육원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교육 사업, 일정 및 공지 사항 안내
	14:00~18:00 (4시간)	KBS 미래기술연구소 전성호 책임연구원		ATSC 3.0 기반 지상파 UHD 전송 기술 표준과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구축 · 국제원자시(TAI) 기반 SFN 송신 장치 · A/324 표준 기반 Broadcast Gateway · A/321와 A/322 표준 기반 Exciter · 장비 설치 및 전송 파라미터 설정의 실제 ATSC 3.0 SFN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적화 방안 · 송신기 최대 간격 고려 Guard Interval 설정 · 필드테스트를 통한 CIR 예측값 수집 · 각 송신기마다 SFN Delay Offset 조정
2일차 7/19(수)	10:00~12:00 (2시간)	MBC 기술연구소 UHD팀 남윤석 연구원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부가 서비스란? · 개요 및 용어 정의 · 기술 표준 부가 서비스 사례 · 국내외 현황 부가 서비스 연관 기술 · ATSC 3.0, HbbTV 2.01, HTML5 지상파 UHD 부가 서비스 · 홈포털, A-ESG(지능형 ESG), 2nd 스크린 서비스
	12:00~13:30(1시간 30분)			중 식
	13:30~15:30 (2시간)	KBS 네트워크운영부 구자훈 차장		UHDTV 적용 기술 소개 - OFDM UHDTV 송신기 구조 · Doherty Power Amplifier · Coupler / Divider / Combiner · Stub, 2nd Harmonic Filter
	15:30~17:30 (2시간)	KBS TV송출부 이병호 팀장		UHD 사업 추진 경과 UHD 구조 설계 · 베이스밴드 및 헤드엔드 구성 · 서비스 구성 송수신 정합 테스트
3일차 7/20(목)	10:00~12:00 (2시간)	로데슈바르츠 BCM파트 김종명 차장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UHD 무선국 검사항목 · 주파수 정확도 · 대역외 발사강도 · 첨두 전력과 평균 전력 ·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 점유 주파수 대역폭 · MER
	12:00~13:30(1시간 30분)			중 식
	13:30~15:30 (2시간)	로데슈바르츠 PS팀 조현호 차장		RF 및 전자파 측정 기초 이론 · RF기초 및 전자파 특성 · 전파파 측정 기초 스펙트럼 분석 이론 및 실습 · 스펙트럼 분석 기초 및 주요 파라미터 · UHD 및 신호 측정 실습
	15:30~17:30 (2시간)	텍트로닉스 (Tektronix) 우주형 부장		Video over IP Technology trend · ST2022-6/7, ST2110 등 IEEE1588 PTP(Precision Time Protocol) · · · 기술 소개 SMPTE2059 기술 및 구성
	17:30~17:40(10분)	방송기술교육원		설문 조사 및 종료

※ 위 교육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edu.kobeta.com)를 참고 바랍니다.

디지털 신호 시스템 품질관리

교육 일정

일정 2017.07.25.(화) ~ 07.27.(목), 총 3일

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15명

장소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문의

교육비 무료

담당자 민서진 대리, 박세나

문의사항 02-3219-5640~1

E-mail bea@kobeta.com

접수 방법

7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일정	시간	강사	교육 장소	교육 내용
1일차 7/25(화)	13:40~14:00(20분)	방송기술교육원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SMIT) 뉴미디어학부 공학전공 김용구 교수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교육 사업, 일정 및 공지 사항 안내
	14:00~15:30 (1시간 30분)			디지털 방송 시스템 구조 및 제작 시스템 · HD/UHD 신호 포맷 (BT.709, BT.2020) · HDR/WCG 비디오 (ST.2084, ICTCP 색공간) · SDI 신호 형식과 Embedded Audio
	15:30~17:00 (1시간 30분)			비디오/오디오 압축 시스템 · 비디오 압축의 기본 원리 · Intra/Inter 프레임 압축 · 압축 비트스트림 구조와 엔코더 파라미터 · H.264 vs. H.265 · 고품질 오디오 압축의 기본 원리 · Dolby AC-3 (Enhanced AC3)와 MPEG AAC · MPEG-H (3D) 오디오
	17:00~18:00 (1시간)			MPEG 시스템과 디지털 방송의 송출 ·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본과 MPEG-2 시스템 · MPEG-2 TS 구조와 데이터 접근 순서 · ATSC 2.0 송출 시스템 구조와 ATSC 3.0
2일차 7/26(수)	10:00~12:00 (2시간)	KBS 제작시설부 신종섭 감독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디지털 비디오 신호의 이해 · 신호 구조, HD-SDI UHD Video 신호 포맷과 시스템의 구성 · Quad, 12G SDI와 VoIP
	12:00~13:30(1시간 30분)			중 식
	13:30~15:30 (2시간)	KBS 제작시설부 은택기 감독		디지털 비디오 장비의 동작 원리 비디오 신호 에러 종류와 분석 · Jitter 측정, Timing Error, A/V 립싱크 등
	15:30~18:00 (2시간 30분)	KBS 제작시설부 이한나 감독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 측정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이해 디지털 오디오 신호 레벨과 라우드니스 디지털 오디오 신호 측정 UHD Audio 코덱과 AoIP
3일차 7/27(목)	10:00~12:00 (2시간)	KBS 제작시설부 임의교 감독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TS신호의 개요 및 시스템 구성 TS신호 전송과 측정 방송 품질과 MPEG TS신호와의 관계 PSIP/PSI 시스템의 구성과 전송 에러
	12:00~13:30(1시간 30분)			중 식
	13:30~15:30 (2시간)	KBS 제작시설부 최무경 부장		TS 신호 측정 · TS 신호의 Bitrate와 신호구성의 이해와 측정 ATSC 3.0의 신호 구조 · MMT, ROUTE, 서비스 시그널링
	15:30~18:00 (2시간 30분)	KBS 제작시설부 김도형 감독		파일 시스템 기반 제작 프로세스의 이해 파일 시스템의 기본 동작 원리 최적 운용 방안 파일 시스템과 코덱과의 관계 UHD 코덱과 제작 편집 시스템의 이해
	17:30~17:40(10분)	방송기술교육원		설문 조사 및 종료

※ 위 교육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edu.kobeta.com)를 참고 바랍니다.

28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28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8.05.15-18
COEX, SEOUL

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 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